

‘대응 부실’ 수사받는 용산소방서장...소방 당국 “적극 지휘”

이일 대응국장 “공동대응 인지 못했을 것” “현장서 적극적 지휘·관여한 것으로 파악” “순천향대병원 응급실 아닌 영안실로 이송”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한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소방 당국은 당시 경찰의 참사 전 공동대응 요청을 용산소방서장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고, 현장 지휘도 적극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37분과 오후 9시1분 소방에 공동대응 요청을 했지만, 소방이 출동 없이 종결해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소방청은 경찰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상자가 없고, 구급차가 필요 없는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소방 대응 단계 상황이 늦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소방 대응 1단계는 오후 10시

43분, 2단계는 오후 11시13분, 3단계는 오후 11시50분 발령된 바 있다. 1단계는 최초 현장지휘관, 2단계는 용산소방서장, 3단계는 서울소방본부장이 발령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소방에 필요한 부분이 구급차인지, 또는 구조대인지, 또는 화재출동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신고를 받는 접수대에서 판단해서 종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산소방서장에게 그런 사항이 전달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서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국장은 용산소방서장이 당시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휘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용산소방서장은 이태원 파출소에 대기하고 있어서 현장 상황을 출동할 때 인지했다”며 “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무전 기록에 따르면 용산소방서장은 오후 11시5분경부터 사고를 직접 지휘하며 경찰력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했다.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을 임시 안치소로 지정해 의료 인력이 분산됐고, 이에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가장 가까운 영안실이 순천향대병원이고, 대부분 응급실이 아닌 영안실로 이송됐다고 해명했다.

이 국장은 “당시 사망 판정받은 분들이 구출이나 CPR 과정에서 의복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현장에서 그것을 사진을 촬영하는 일도 있어서 현장에 그대로 두는 것은 현장지휘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망자에 한해서 가장 가까운 영안실 쪽으로 지정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부상자 처리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았냐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영안실로 바로 가셨다”며 “4분 정도 응급실로 이송됐고, 2분은 사망 판정을 받고 나머지 2분은 중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현장에 첫 도착한 구급차가 용



이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산소방서가 아닌 중로소방서인지라는 질문에는 “사고 발생 당시 관할에 전진배치돼 있던 구급차가 다른 출동으로 이미 나가 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구급차 등은 동원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동원된 구급차는 서울소방본부 소속 60대, 타 시도 구급차가 89대 등 149대다. 구체적으로 경기남부본부

에서 24대, 경기북부본부에서 25대, 인천·강원·충남·충북에서 각 10대 등이 동원됐다.

이 국장은 “대형재난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때 일반적으로 사실구급차 등을 동원하지는 않는다”며 “119구급차가 상당히 많이 있고 통신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선욱기자



‘이태원참사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부상자 폐유와 진상규명 발원’을 위한 오세투지를 하고 있다.

광주서 ‘배달 대행 기사’ 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 등이 무더기 적발

유학생·구직자 등 32명 적발...200만~1000만원 범칙금 처분

광주에서 배달 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배달 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 국적의 유학생·구직자 등 3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 자격으로 지역 대학에 다니면서 이륜차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개인 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유학생은 운전면허증도 없이 배달 대행 기사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학생은 사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만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학부 과정은 20시간, 석·박사 과정은 30시간까지만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식당 아르바이트 등 허가된 직종만 가능하다. 배달 대행업은 허가 요건이 엄격하다. 더욱이 외국인 유학생 체류 자격으

로는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17조 제1항(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불법 취업 기간에 따라 범칙금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특히 출입국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위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범칙금이 가산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 1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펼쳐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합동 단속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박인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은 “무면허 배달 대행 등 외국인 불법 유상 운송 행위로 교통사고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